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및 논의 현황[1)]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sjyoon@kipf.re.kr)

Ⅰ. 서론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2020년 각 국가에서는 보건정책 및 가계·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였다. 또한 2021년에 들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대비하기 위한 정책들이, 조세 및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초기의 미흡한 대응 및 취약한 공공의료시스템 등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코로나19 대응 및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위한 대규모 정책패키지가 발표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을 조세·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및 관련 논의과정에서 부각된 쟁점들이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에 있는 "한국판 뉴딜"에 제시하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Ⅱ. 미국의 코로나19 전개 및 대응

1. 미국에서의 코로나19 전개 및 현황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2020년 1월 22일에 첫 확진자가 발

1) 본고는 윤성주(2021) 및 윤성주·구윤모(2021)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기술한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방향』(가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1.12.)의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생하였다. 같은 해 2월부터 해안 주(coastal states)에 위치한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였지만, 미국 정부는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코로나19 보건위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초기 대응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탁상우, 2020).

그 결과, 2021년 9월 29일 현재, 미국에서의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는 전 세계 확진자 2억 3,360만 5,272명의 18.9% 수준인 4,404만 215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사망자: 71만 1,142명, 치명률: 1.6%). 인구 100만명당 발생률 또한 13만 3,051명으로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1>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단위: 명)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발생률	133,051	113,959	107,278	50,350	13,428	6,022

출처: Corona Live, https://coronaboard.kr/, 검색일자: 2021. 9. 29.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큰 충격에 대응하여, 미국에서는 2020년 트럼프 행정부와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러 대응책을 발표·운용하였으며, 현재 추가적인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의 큰 충격에 대응하여 2020년 트럼프 행정부와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러 대응책을 발표·운용하였으며, 현재 추가적인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

2.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로 경제적 타격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이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2020년에 다섯 차례에 걸친 지원책을 통해 대응하였다.

2020년 3월 6일과, 3월 18일에 각각 입법·발효된 「코로나 준비·대응 추경(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과 「코로나 대응 가족 우선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은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검사,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등과 같은 보건 분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편성되었다.

반면, 3월 27일에 입법·발효된 「코로나 지원·구호·경제보장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은 미국 역사상 단일 법안으로는 가장 큰 2조 2천억달러 규모로 편성되었다. 당시 상원을 장악했던 공화당이 주도하고,

트럼프 행정부 CARES Act에서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지원정책의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국 구조계획법(ARP)」 등에 포함되어 확대·연장되는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하원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초당적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가계와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4월 23일과 12월 27일에 입법·발효된 「급여·의료 지원법(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과 「코로나 대응 구호·추경(Coronavirus Response and Relief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은 앞서 입법·발효된 CARES Act에서의 주요 정책을 추가·연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표 2>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법안(2020년)

코로나 준비·대응 추경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코로나 대응 가족우선법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코로나 지원·구호·경제보장법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	급여·의료 지원법 (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	코로나 대응·구호 추경 (Coronavirus Response and Relief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0. 3. 6.	2020. 3. 18.	2020. 3. 27.	2020. 4. 23.	2020. 12. 27.
83억달러	1,920억달러	2.2조달러	4,830억달러	9,200억달러
• 보건지출 중심 • 소규모 추경세출예산	• 취약계층 생계지원 •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검사 • 고용안정	• 1차 EIP[1)] • 실업급여 • 중소기업 PPP[2)]	• 중소기업 PPP[2)] 추가	• 2차 EIP[1)] • 실업급여 연장

주: 1) EIP: 경제부양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
2) PPP: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출처: 윤성주(2021)

트럼프 행정부 CARES Act에서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지원정책의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국 구조계획법(ARP)」 등에 포함되어 확대·연장되는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 중 가계지원 정책으로는 경제부양지원금과 실업급여 확대 등이 있다. 경제부양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 EIP)은 세금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부부합산 2,400달러)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조정 총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이 7만 5천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 100당 5달러씩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7세 미만의 부양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500달러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실업급여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였다. 첫째, 금액 측면에서는, '연방팬데믹실업수당(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FPUC)'을 도입하여, 일반적인 실업수당에 연방정부가 매주 600달러를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둘째, 대상 측면에서는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도 임시적으로 '팬데믹 실업수당(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지급기간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실업수당은 26주 동안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보건위기 동안 추가적으로 13주 동안 실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PEUC)'을 통해 지급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리고 CARES Act에서의 주요 정책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고용유지를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이 있다.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은 코로나19 위기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지만, 대출자인 기업이 8주 동안 임금, 가족돌봄휴가, 병가 등 급여 관련 항목에 대해 지출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실업급여의 경우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금액, 대상, 지급기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였다.

Ⅲ.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1. 배경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2009년 10월에는 실업률이 1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2월에는 3.5% 수준까지 낮아졌으나, 코로나19 위기 초기인 2020년 4월, 14.7%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21년 들어서는 6% 내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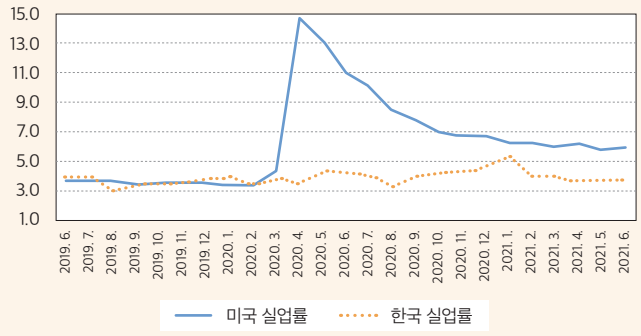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가 미국 실업률에 미친 영향은,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코로나19 이전 실업률과 코로나19 위기과정에서의

2) 2020년 2월 실업률 수치는 최근 50년 중(1969년 이후) 최저치(3.5%)를 기록하는 경제적 호황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 실업률은 1948년 데이터 구축 이후 역대 최고치인 14.7%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미국은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주요 국가 정부가 코로나19 초기에 고용 유지 정책에 방점을 둔 반면,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에서는 대량 해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가 대다수 국민에 대한 현금지원과 실업급여 강화를 통해 대응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 미국 실업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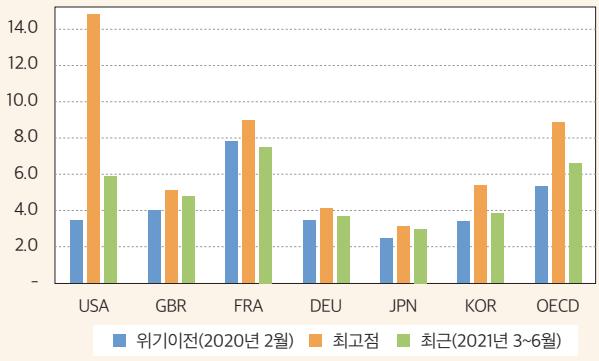


주: 계절조정

출처: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국 통계청(KOSI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 코로나19 위기가 주요국 실업률에 미친 영향

(단위: %p)



출처: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21. 7. 7.

최고 실업률 간의 차이가 OECD 국가들의 평균이 3.5%p인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11.3%p 수준으로 매우 높음을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초기에 고용을 유지하는 정책에 방점을 둔 반면,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에서는 대량 해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가 대다수 국민에 대한 현금지원과 실업급여 강화를 통해 대응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한국은행, 2020).

2. 주요 정책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바이든 당시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감면 정책을 무효화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발전적 재건(Build Back Better)을 달성하는 조세·재정 정책을 제시하였으며(최인혁, 2020),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세 가지 정책패키지를 발표하였다.

가.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ARP)

2021년 1월에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3월 11일에 1조 8천억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법(ARP)」(이하 「구조계획법(ARP)」)이 발효되었다. 「구조계획법(ARP)」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취약계층 구제 및 경제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내용 가운데 사회안전망 강화, 빈곤 방지와 같은 사회보장 측면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는 2020년 3월과 12월에 이은 세 번째 경제부양지원금, 실업수당 연장, 한시적 대규모 세액공제 및 주·지방정부·교육기관 지원 등이 주요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다. 3차 경제부양지원금은 1인당 최대 1,400달러로, 1·2차 때보다 지원액이 증가했으나,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의 소득 상한이 기존보다 낮은 8만달러로 설정되었다. 즉, 3차 긴급지원금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지원액은 인상된 반면, 수급요건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업수당과 관련해서는 연방팬데믹실업수당(FPUC)의 경우, 법안발의 시점에는 주당 400달러를 계획하였지만, 법안 논의과정에서 금액을 300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지급기한을 계획보다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프리랜서 등에 적용되는 팬데믹 실업수당(PUA)과 수급기간을 확대하는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PEUC)이 「구조계획법(ARP)」에서 연장되었다.

조세 측면에서는 2021년 과세기간 동안에 아동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EITC), 부양가족 세액공제, 보육비용 소득공제 등을 통해 개인과 가구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아동세액공제의 경우, 대상을 17세 미만에서 17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1.5배가량 확대하였고, 부양가족 세액공제와 보육비용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공제액을 각각 4배, 2배 정도 인상하였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1조 8천억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법(ARP)」이 발효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구제 및 경제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가운데 사회안전망 강화, 빈곤 방지와 같은 사회보장 측면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

3차 경제부양지원금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지원액은 인상된 반면, 수급 요건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세 측면에서는 2021년 과세기간 동안에 아동세액공제, 무자녀 근로장려세제, 부양가족 세액공제, 보육비용 소득공제 등을 통해 개인과 가구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표 3> 「미국 구조계획법(ARP)」 주요 재정정책

분야	주요 내용
경제부양지원금 (제3차)	• 1인당 최대 $1,400 (1차 $1,200, 2차 $600), 미국 가정의 85% 수혜 •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지 않음(1차에서는 구분) • 개인 $75,000(부부 $150,000) 전액수급, 상한 $80,000($160,000) ※ 1차: 개인 $75,000(부부 $150,000) 전액수급으로 동일, 상한 $99,000(부부 $198,000) → 3차 EIP: 금액 증가, 수급 요건 강화
실업수당	• 연방팬데믹실업수당(FPUC) $400/week을 계획했으나, 금액을 $300/week로 낮추는 대신, 지급기한을 기존 계획(~2021. 8. 29.)보다 연장(~2021. 9. 6.) • 팬데믹긴급실업수당(PEUC)과 팬데믹실업수당(PUA) 지급기간 추가 연장(~2021. 9. 4.)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긴급경제자금융자(EIDL) 지속 지원

출처: 윤성주(2021)

<표 4> 「미국 구조계획법(ARP)」 주요 조세정책

	지원	주요 내용
개인	아동세액공제	• 17세 미만 아동에 대해 최대 $2,000를 적용하던 세액공제금액을 6세 미만 1인당 최대 $3,600, 6~17세 이하 1인당 최대 $3,000까지 인상 – 소득 기준, 개인 $75,000 미만, 부부 $150,000 미만이 대상, 그 이상의 경우 credit 금액이 점차 줄어들어, 1인 $90,000, 부부 $170,000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자녀수에 제한 없으며,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tax credit 전액을 현금지급
	무자녀 근로장려세제 (EITC)	• 자격·연령·세액공제 산출식을 수정하여 무자녀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적용액을 $543에서 $1,502까지 확대
	부양가족 세액공제	•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을 확대하여 비용 및 소득에 따른 최대 공제액을 $2,100에서 $8,000로 인상하고, 환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보육비용 소득공제	• 적격 납세자의 보육 관련 비용의 최대 소득공제액을 $5,000에서 $10,500로 인상
	공적부조 공제	• 공적 부조 공제(Premium Tax Credit: PTC) 관련, 2021년과 2022년에는 빈곤 소득 기준 400% 이하의 소득 상한액 요건을 폐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2~9.5%였던 납부요율 역시 한시적으로 0~8.5%로 완화
	학자금대출 소득공제	• 2020. 12. 31.~2026. 1. 1. 사이에 실행된 중등 과정 이후 학자금 대출은 총소득에서 제외
사업자·고용주	급여세 공제	• 유급병가·유급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고용주 급여세 공제를 2021. 9. 30.까지 연장
	고용유지 세액공제	• 2021. 6. 30.~12. 31.까지 고용유지 세액공제 확대 – 2020.2.15일 이후 설립된 연수입 $1,000,000 이하 스타트업기업은 공제액이 분기당 최대 $10,000에서 $50,000로 인상 – 2019년 동일 분기수입의 10% 미만의 수입이 발생하는 고용주의 경우, 세액공제금액을 결정할 때 모든 임금을 적격임금으로 처리
	과세 대상 소득축소	•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통해 지급된 환급이 필요하지 않은 선지급금과 레스토랑 활성화기금의 추가 보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과세 대상 총소득에서 제외
기타	외국세액공제	• 2021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TC) 한도액 산출 시 미국 및 해외 소득의 공제 배분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지급한 이자비용을 포함하도록 한 내국세법(Section 864) 조항 폐지
	제3자 결제기관 거래신고	• 제3자 결제기관(카드사, 전자결제시스템 등)의 경우, 수취인의 거래신고의무 기준을 기존의 연간 $20,000에서 2022년부터 연간 $600로 강화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재정포럼』, 2021.4~2021. 5.의 내용을 표로 정리

EITC의 경우에는 무자녀 저소득층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3배가량 인상하였다. 사업자·고용주에 대해서는 급여세공제와 고용유지세액공제의 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일부 선지급금과 보조금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하였다.

나. 미국 인프라계획(American Jobs Plan: AJP)

바이든 행정부는 3월 31일, 미국 구조계획(ARP)에 이어 향후 8년 동안 2조 2천억~2조 3천억달러 규모의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인프라 재건·현대화, 기후변화 대응,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국과의 경쟁 우위 구축 등과 같은 물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인종 간 격차 완화 등을 목표로 교육과 보육·돌봄과 같은 인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은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국과의 경쟁 우위 구축 등과 같은 물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인종 간 격차 완화 등을 목표로 교육과 보육·돌봄과 같은 인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표 5> 미국 인프라계획(AJP) 규모(추정치)

정책 구분	비용규모
운송 인프라(인프라 복원력 개선 $500억)	$6,210억
청정 에너지 인프라	$3,110억
교육/보육 및 주택 인프라	$3,780억
제조업 및 R&D 인프라	$5,800억
돌봄 인프라	$4,000억
정책 지출규모	$2.2~2.3조

출처: White House, "Fact Sheet: The American Jobs Plan," 2021. 3. 31.; 윤성주·구윤모(2021) 재인용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인프라계획(AJP)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으로 법인세 개혁방안(The Made in America Tax Plan)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15년 안에 인프라 관련 비용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서 21%로 대폭 인하되었던 법인세율을, 28%로 일부 환원하는 계획과, 대기업이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장부상 이익에 대해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얻는 수익에 부과하는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인프라계획(AJP)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으로 법인세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15년 안에 인프라 관련 비용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6> 미국 인프라계획(AJP) 주요 조세정책

구분			TCJA 이전	TCJA		AJP(안)
법인	법인세율		15~35% 누진세율(4단계)	21% 단일세율		28% 단일세율
	대기업 최저한세		-			회계이익의 15%
국제	GILTI	실효세율(공제)	-	GILTI	10.5~13.25% 실효세율	21% 최저실효세율
		소득면제			국외자산의 10% 소득면제	국외자산의 10% 소득면제 폐지
		산정 기준			전 세계 통산	국가별 통산
	FDII(공제)		-	FDII 도입		FDII 폐지
	BEAT(비용부인)		-	BEAT 도입		BEAT 폐지, SHIELD 신설·대체

주: 1. TCJA: Tax Cuts and Jobs Acts;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세제개편(2018~2025년)
2. GILTI Tax: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얻은 무형자산 관련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3. FDII 공제: 미국기업이 해외 수출소득에서 무형자산 부분에 대해 높은 공제율을 허용하는 제도
4. BEAT Tax: 미국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지불하는 공제가능한 비용을 제한하는 세원잠식·남용방지 세제

출처: 정훈(2021)

Income) 세율을 현재의 2배 수준인 21%로 인상하고, 국가별 통산방식을 통해 기업들의 세원잠식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해외 유형자산 수익에 대한 면세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수출 소득과 관련하여 높은 공제율을 허용하고 있는 FDII(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를 폐지하는 방안이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다. 비용처리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도입한 세원잠식·남용방지세 BEAT(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를 폐지하고, 좀 더 강화된 수준의 SHIELD(Stopping Harmful Inversions and Ending Low-tax Developments)를 새롭게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3)]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국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화석연료 산업에 부여되어온 보조금과 각종 세금공제를 폐지하는 방안 또한 제안하고 있다. 즉, 석유·가스 생산업체에 적용하던 특별 외국 세액공제와 프로젝트 초기 시추비용에 대한 공제 등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확보되는 세수는 공해방지 사업을 위한 슈퍼펀드(Superfund)에 불입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4)]

3) 세원잠식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BEAT(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제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 세제개혁에서 도입되었으나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새로운 제도인 SHIELD(Stopping Harmful Inversions and Ending Low-tax Developments)를 신설하여 다국적기업 본사가 해외에 있는 자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의 세금공제를 중단하여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체제를 구축하고, 절세 목적으로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행태를 제재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이정민, 2021).

4) 3월 말에 발표된 인프라계획(AJP)은 이후 규모, 재원 등이 조정되어 법안이 마련되는 등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3. 법안 관련 주요 논의 및 진행 현황"에서 살펴본다.

다.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 AFP)

3월 말에 발표된 2조 2천억달러 규모의 '인프라계획(AJP)'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4월 28일,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향후 10년 동안 1조 8천억달러 규모의 '가족계획(AFP)'을 발표하였다.

'가족계획(AFP)'은 교육(5,060억달러), 가정 및 아동(4,950억달러), 각종 세액공제 연장(8,550억달러) 등 가족 지원 중심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가정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증대, 보육에 대한 부담 완화, 아동빈곤 감소, 자녀세대 및 가정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미국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의 수혜가 모두에게 확대·공유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중간소득 가구의 경우 보육비용이 가구소득의 7%를 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교육, 보육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재정지출계획과 함께, 3월에 입법 발효된 「구조계획법(ARP)」의 주요 세금공제를 연장 또는 영구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계획(AFP) 지출에 대한 재원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5] 즉, 고소득층 세금 인상, 과세제도 정비·강화 등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1조 5천억달러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득세 최고 세율을 현재 37%에서 트럼프 행정부 이전 수준인 39.6%로 인상하고, 고소

가족계획(AFP)은 가족 지원 중심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의 수혜가 모두에게 확대·공유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7> 미국 가족계획(AFP) 주요 재정·조세감면 정책

분야	주요 내용
교육	•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 무상교육 확대, Community College 학비 무료 •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Pell Grants) 확대
가족·보육	•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 유급 가족돌봄휴가 및 유급병가 프로그램 도입 • 취약계층 지원, 보육료 부담 완화, 다양한 보육 옵션 제공, 양질의 보육 인프라 투자 및 보육서비스 제공자 훈련
영양	• 여름 동안의 학생 대상 가정식료품 지원(EBT) 확대
세금감면 확대	• 미국 구조계획(ARP)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를 2025년까지 연장(영구시행 추진)하고, 자녀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는 영구 도입 • 미국 구조계획(ARP)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아동·부양가족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CDCTC)를 일부 조정하여 영구 도입

출처: White House, "Fact Sheet: The American Families Plan," 2021. 4. 28.; 한국은행(2021) 등을 참조하여 작성

5)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연소득 40만달러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가족계획(AFP) 지출에 대한 재원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표 8> 미국 가족계획(AFP) 주요 조세정책

구분	TCJA 이전	TCJA	AFP(안)
소득세율	10~39.6%	10~37%	10~39.6%
소득세율 누진구간 (단독가구 최고세율 개시구간)	$426,700	$500,000	$452,700
고소득 자본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최대 20%(+3.8%)		소득세 최고세율 39.6%(+3.8%)
	일반세율 구간 연계	과세구간 별도 부여	
고액 상속·증여 자본소득세			상속·증여 시점 과세

출처: 정훈(2021)

득층[6]에 적용되는 자본소득세율을 현재 20%에서 소득세율과 같이 39.6%로 인상하는 방안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액 상속·증여와 관련해서 상속·증여 시점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에 대해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계획되어 있다.[7]

3. 법안 관련 주요 논의 및 진행 현황

미국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100석 가운데 60석의 동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안통과는 과반 투표이지만,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 입법 발효된 「구조계획법(ARP)」은 필리버스터를 동원할 수 없는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었다. 즉,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양당이 초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양당 의석대로 분열된 표결 결과가 나타났다.[8] 후보시절 협치를 강조했던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 취임 후 첫 번째 법안을 이와 같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담이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 지지, 그리고 연준(Federal Reserve Bank: Fed)과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의 「구조계획법(ARP)」에 대한 호의적인 메시지와 연구 내용에 힘입어,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50:49로 법안이 통과되었다(김태근, 2021).

6) 연간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에 자본이득세율 39.6%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Households making over $1 million—the top 0.3 percent of all households—will pay the same 39.6 percent rate on all their income, equalizing the rate paid on investment returns and wages (White House Fact Sheet: The American Families Plan, 2021. 4. 28.)

7) 4월 말에 발표된 가족계획(AFP)은 인프라계획(AJP) 수정 등과 관련하여 규모, 투자범위 등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3. 법안 관련 주요 논의 및 진행 현황"에서 살펴본다.

8) 미국 상원은 공화당 50석, 민주당 50석(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포함)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부통령이 상원의원직을 맡고 있어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미국 구조계획법(ARP)」에 이어 3월 말과 4월 말에 각각 발표된 '인프라계획(AJP)'과 '가족계획(AFP)'은 현재 계속 논의 중이다. 3월 말 인프라계획(AJP)이 발표된 후 공화당과 민주당은 4월과 5월에 각각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나, 모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6월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투자규모를 기존 보다 1조달러가량 하향 조정한 1조 2천억달러 규모의 수정된 인프라 투자안을 제시하였고, 또한 법인세 인상을 보류하는 대신 모든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안을 제안하며 합의를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6월 말,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1조 2천억달러 규모의 수정안에 합의하였으나, 7월 21일 상원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심사·논의를 위한 본회의 상정투표(procedural motion)가 부결되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조정·협의를 통해 8월 10일, 향후 5년간 약 1조~1조 2천억달러 규모로 수정된 인프라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9] 따라서 수정된 인프라법안(IIJA)의 경우 마지막 하원의 표결만이 남아 있지만, 두 번째 인프라법안인 휴먼인프라법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 등으로 하원의 인프라법안(IIJA) 처리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10]

상원을 통과한 수정된 인프라계획법안(IIJA)은 물적 인프라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존 인프라계획(AJP)보다 1조달러 이상 하향 조정된 규모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인프라 관련 두 번째 법안으로 보건·복지, 교육, 기후변화대응 분야 등을 포함한 3조 5천억달러 규모의 휴먼인프라법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대규모 휴먼인프라법안에 대해 공화당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민주당 일부에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10월 들어 휴먼인프라법안의 상한규모를 당초 제시하였던 3조 5천억달러 수준에서 1조 9천억~2조 2천억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휴먼인프라법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가 크고, 부채한도 확대 또한 현재 두 인프라 법안과 함께 미국 의회에서 합의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수정된 인프라법안(IIJA)과 휴먼인프라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투자범위, 재원조달 방안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글로벌 최저법인세율과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애초에 21%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지난 5월 현실적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세율을 하

휴먼인프라법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가 크고, 부채한도 확대 또한 미국 의회에서 합의해야 하는 중요 이슈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수정된 인프라법안과 휴먼인프라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투자범위, 재원조달 방안 등과 관련하여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9) 수정된 인프라계획법안(IIJA)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미사용 코로나19 구조자금 재배정, 암호화폐 과세수입 등을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21. 8. 11).

10) 몇 차례 표결 일정이 연기되었으며, 현재는 10월 31일로 표결 일정을 연기한 상태에 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 7.)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 추경~2025년 동안 총사업비 160조원 규모의 재정투자와 일자리 190.1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였다. 2021년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총사업비가 220조원, 일자리 창출 목표가 250만개로 상향 조정되었다.

향 조정하여 15%의 최저법인세율을 다시 제안하였다. 다음 달인 6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7월에는 OECD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는 협의안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10월 8일에는 모든 OECD 회원국가와 G20 회원국가 등 136개국의 지지에 힘입어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를 2023년부터 도입하는 내용이 최종 합의되었다[11] (한국무역협회, 2021. 7. 2.; OECD, 2021. 10. 8).

Ⅳ. 한국판 뉴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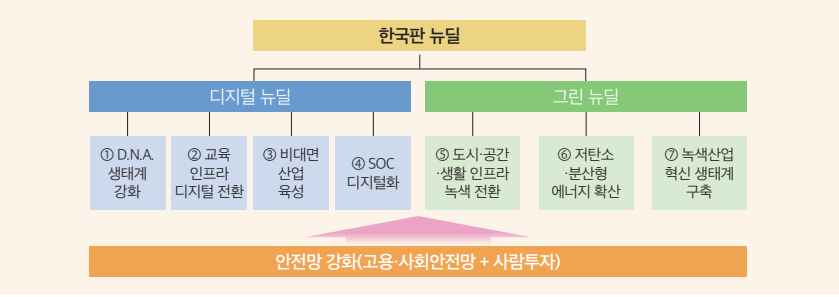
한국은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월 말과 3월 초에 대구·경북지역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협조 등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적인 수행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저성장에 대한 우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양극화 심화, 위기과정에서 드러난 사회·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인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이후를 준비·대응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 직면하게 될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020년 추경~2025년 동안 총사업비 160조원(국비 114.1조원, 지방비 25.2조원, 민간 20.7조원) 규모의 재정투자와 일자리 190.1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과 이를 지원하는 안전망 강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촉진과 포용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21년 7월, 정부는 기존 계획을 보완하여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신산업 육성 부문과 탄소중립 부문이 추가되었으며, 기존 계획에서 2개의 축이었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이 추가되었다. 즉, 코로나19를 겪으며 사람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불평등·격차 해소 및 청년 지원의 필요성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안전망 강화 측면을 세 번째 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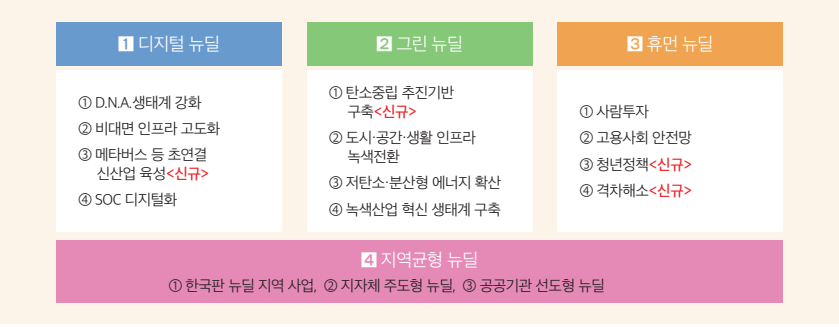
11) 그동안 반대 입장을 취해왔던 헝가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등은 10월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으나,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4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림 3] 「한국판 뉴딜 1.0」 구조



출처: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 7.

[그림 4] 「한국판 뉴딜 2.0」 구조



출처: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2.0」, 2021. 7. 14.

코로나19를 겪으며 사람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불평등·격차 해소 및 청년 지원의 필요성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판 뉴딜 1.0」의 안전망 강화 측면을 「한국판 뉴딜 2.0」의 세 번째 축인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하였다.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하였다. 투자규모 또한 2025년까지 220조원으로 기존 계획 대비 60조원 증가하였고, 직·간접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190.1만개에서 250만개로 증가하였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인프라계획(AJP)과 가족계획(AFP),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전반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또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두 국가 모두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여, 성장, 복지, 기후대응 분야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장과 관련하여 한국은 미래성장 기반을 모색하며,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디지털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제조업 및 노후화된 전통 인프라 측면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확대·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두 국가 모두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된 사회·구

복지와 관련해서는 두 국가 모두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된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완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으며, 불평등 완화, 교육과 보육·돌봄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적 문제점을 완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으며, 불평등 완화, 교육과 보육·돌봄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인종 간의 갈등·격차 등을 해소하고 포용성을 강화하는 측면, 한국의 경우에는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대 등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전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한편, 관련 투자를 미래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화석연료 산업에 제공해왔던 조세재정 지원을 폐지하고,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여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가속화를 계획하고 있다.

<표 9> 한국과 미국의 경제 회복·성장 정책

구분	한국	미국
계획	한국판 뉴딜→한국판 뉴딜 2.0	인프라계획(AJP)+가족계획(AFP)
규모	• 220조원 • 2020년 7월~2025년	• 인프라계획 $2.2조/8년 • 가족계획 $1.8조/10년
일자리	250만개	인프라 계획: 270만개/10년
성장	(디지털 뉴딜) 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초연결 신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인프라계획) 운송인프라 개선·현대화, 제조업·공급망 지원, 대규모 투자, 초고속 통신망 구축, AI 등 신기술 R&D에 대한 대규모 투자
복지	(휴먼 뉴딜) 사람투자, 고용·사회안전망, 청년정책, 격차 해소	• (인프라계획) 구조적 불평등 및 빈곤해소 정책 측면에서 주거·보육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 (가족계획) 무상교육 확대, 보육지원, 유급휴가제도, 저소득층 세금감면 확대, 교육접근성 확대, 중산층 강화
기후대응	(그린 뉴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인프라계획) 전기차 충전소, 클린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주: 미국의 인프라계획과 가족계획의 규모, 투자범위 등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규모·범위의 축소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 7); 윤성주·구윤모(2021. 7.) 등을 참조하여 작성

V. 쟁점 및 시사점

1. 법안 관련 주요 쟁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후 발표한 대규모 조세·재정 지출 정책들과 관련하여 현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정책 법안과 관련해 부각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는 큰 정부로의 패러다임 변화, 즉 정부 역할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이 미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인프라계획(AJP)에 전통적인 물적 측면뿐 아니라 인적 측면을 포함한 것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가족계획(AFP) 등을 통한 복지 측면의 확대가 중산층을 강화하고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큰 정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주도 정책의 효과성·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민간투자를 저해하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문에 대한 급격한 재정확대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기도 하다.[12]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 실업률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 못한 것을 과도한 실업급여 혜택으로 간주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2021년 3월부터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머스(Lawrence H. Summers) 하버드대 교수 등은 과도한 재정지출이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공화당에서는 "바이든플레이션이 임금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분이 사라지고, 미국 가족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The Newyork Times, 2021. 7. 8.; The Washington Post, 2021. 2. 4.).

바이든 행정부는 큰 정부로의 패러다임 변화, 즉 정부 역할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미국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정부 주도 정책의 효과성·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12) 미국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에서는 미국 가족계획(AFP)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GDP가 0.4% 감소하고, GNP는 0.6% 하락하며, 6만 4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였다(2021. 5. 6).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하는 정책들의 규모는 절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측면에서도 미국 역사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위기 위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표 10> 미국 주요 정책규모

바이든 아젠다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1962~2020년)	오바마 케어 (10년)	Interstate Highway System[1)]
$6.4 trillion	$4.9 trillion	$2.9 trillion	$1.12 trillion	$543 billion

주: 1. Inflation-adjusted 2021 Dollars
1) cost of initial construction for 1956-1992, adjusted inflation
출처: https://www.heritage.org, 검색일자: 2021. 8. 19.

반면, 옐런(Janet L. Yellen) 재무장관은 코로나19 부양책 도입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대처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백악관은 최근 급속한 가격 상승이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과는 같지 않으며, 코로나19의 영향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장기국채 금리 상승으로도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단기에 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Bloomberg, 2021. 3. 14).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의 규모는 절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측면에서도 미국 역사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위기 위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OECD Economic Outlook(2021)에서는 「구조계획법(ARP)」이 2021년 세계성장률을 1%p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경기부양 규모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비영리 초당파 재정기관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CRFB)는 바이든 정부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정책에 대한 재원조달만으로는 현재의 재정 흐름을 안정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수입창출과 함께 지출도 줄여나가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 시사점

앞서 살펴본 경제 회복·성장 정책을 위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은 「한국판 뉴딜」을 추진·운용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먼저,

한국과 미국 모두 새로운 성장 및 생산성 향상에 투자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코로나19를 겪으며 드러난 사회구조적 문제점에 대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은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안전성 강화 측면이 휴먼 뉴딜로 확대되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며 드러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염두에 둘 때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13)]

하지만 「한국판 뉴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공조 및 민간 참여 측면 등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인프라계획(AJP)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존 사업예산의 미사용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는 관련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14)]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 또한 자명하다. 따라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등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상당 부분은 지역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중앙-지방정부 간에 유기적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한국판 뉴딜 2.0」에서 지역 부분을 강화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인 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중앙-지방정부 간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부재정사업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의 재원조달 측면과 관련해서 정부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등을 제시·운영하고 있지만, 사업기간 동안의 재원조달계획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투자계획과 비교할 때, 재원 마련 측면은 상대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규모 정부지출 정책과 관련하여 재원조달방안과 재정건전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의 경우에는 기간별로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멀지 않은 미래에 증세가 필요

「한국판 뉴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공조 및 민간 참여 측면 등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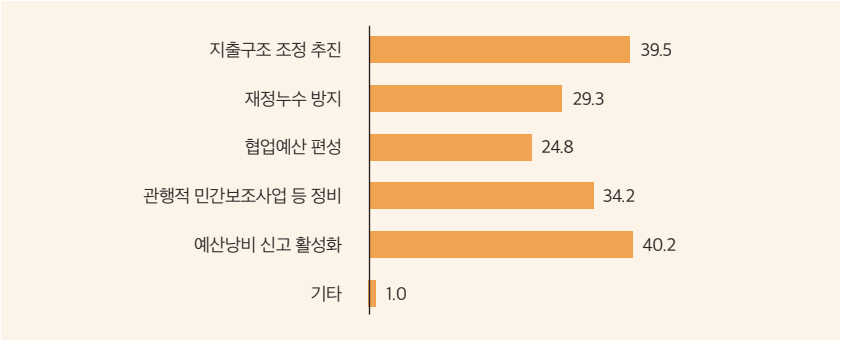
13) OECD(2021. 4.)에서는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국가별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다른 주요국들과 달리, 권고사항 중에서 사회보장 분야(사회안전망강화 및 조세제도 효율성 개선)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14) 한국판 뉴딜의 경우에도 일부 사업에 있어 낮은 집행률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news1, 2021. 7. 19).

우리나라는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멀지 않은 미래에 증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증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중요하다.

[그림 5]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재정제도

(단위: %, 복수응답)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부자료(2020. 2.)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증세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중요하다. 최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예산낭비신고제도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30세대에서 예산낭비신고의 활성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위기의 발생 간격이 짧아지고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 도처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정책의 일관성 부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분명, 적절하지 못한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 따라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길 경우에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받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기대하는 성과도 얻기 어렵다. 이와 같은 측면을 염두에 둘 때, 특히 「한국판 뉴딜」과 같은 중기에 걸친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의 경우에는 정파를 떠난 초당적 지지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KDI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2.0」, 2021. 7. 14.

김태근, 「바이든 행정부 코로나19 대응 정책(American Rescue Plan Act)의 성립 과정과 배경」,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 봄호 Vol. 16., pp. 57~66.

김현아·전병목·윤성주·송경호,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 정책방향』(가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12. (진행 중)

윤성주, 「바이든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및 시사점」,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21. 8. 25.

윤성주·구윤모, 「미국 코로나19 대응 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21. 7.

이정민,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국내외 법인세제 개정 계획」,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 4. 14.

정훈, 「바이든 정부 세제개편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예산춘추』, 국회예산정책처, Vol. 63, 2021. 8., pp. 46~51.

최인혁,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정책」, 현안분석,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12., pp. 32~54.

코리아데이터워크, 『2021년 예산기금안 편성지침 작성관련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2.

탁상우, 「미국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세사회보장리뷰』, 여름호 Vol. 13, 2020, pp. 5~20.

한국은행,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국제경제리뷰』, 제2020-19호, 한국은행, 2020.

_____, 「바이든 대통령, 1.8조 달러 규모의 American Family Plan 공개」, 현지정보, 2021. 4. 2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재정포럼』, 2021.4~2021. 5.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2021: Going for Growth*, 2021. 4. 14.

_____, *Economic Outlook*, 2021.

_____, *OECD Employment Outlook*, 2021.7.

White House, “Fact Sheet: The American Families Plan,” 2021. 4. 28.

뉴스1, 「한국판 뉴딜 '감감'…사업 150개 상반기 집행률 10% 미만」, 2021. 7. 19., https://www.news1.kr/articles/4375989, 검색일자: 2021. 8. 23.

한국무역협회, 「OECD도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합의…130개국 서명」, 『통상뉴스』, 통상지원센터, 무역통상정보, 2021. 7. 2.,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12190, 검색일자: 2021. 8. 3.

한국무역협회,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미 상원 통과」, 통상뉴스, 통상지원센터, 무역통상정보, 2021. 8. 11.,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13509&no=1&classification=&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logGb=A9400_20210812, 검색일자: 2021. 9. 15.

한국 통계청(KOSIS),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1. 8. 10.

Bloomberg(2021.3.14) Yellen Says U.S. Inflation Risk Remains Small, 'Manageable'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3-14/yellen-says-u-s-inflation-risk-remains-small-manageable, 검색일자: 2021. 8. 10.

OECD, "International community strikes a ground-breaking tax deal for the digital age," 2021. 10. 8., https://www.oecd.org/tax/international-community-strikes-a-ground-breaking-tax-deal-for-the-digital-age.htm, 검색일자: 2021. 10. 12.

The Newyork Times, "A Great Inflation Redux? Economists Point to Big Differences," 2021. 7. 8., https://www.nytimes.com/2021/07/08/business/economy/inflation-redux.html, 검색일자: 2021. 8. 10.

The Washington Post, "Opinion: The Biden stimulus is admirably ambitious. But it brings some big risk, too,"2021. 2. 4,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1/02/04/larry-summers-biden-covid-stimulus/, 검색일자: 2021. 8. 10.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s://www.bls.gov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검색일자: 2021. 8. 10.

Corona Live, https://www.corona-live.com, 검색일자: 2021. 9. 29.

Tax Foundation, "Details and Analysis of Tax Proposals in President Biden's American Families Plan," 2021. 5. 6., https://taxfoundation.org/american-families-plan/, 검색일자: 2021. 8. 13.

The Heritage Foundation, https://www.heritage.org, 검색일자: 2021. 8. 19.